

한국개신교와 능력주의(Meritocracy)의 결합 문제 교회세습을 중심으로

신혜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글
- II. 목사 개인 차원에서 : 공적 직위와 사적 점유의 결합
- III. 교단 차원에서 : 해명과 정당화의 차이
- IV. 평신도 차원에서 : 교회세습을 용인하는 의식구조
- V. 나오는 글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10>

• ABSTRACT •

**Criticism of Meritocracy in Korean Christianity: Focusing on the issue
of pastoral succession at Protestant churches**

Lecturer, Shin, HyeJin (Ewha Womans University)

In South Korea, many megachurches are sometimes called “revived churches” or “blessed churches.” However, they are mired in controversy as incidents like “pastoral succession” or “trading of pastorship,” apt to take place in medieval churches, are constantly occurring at these megachurches. Furthermore, criticism has been mounting about the conventionalization of such practices at South Korea’s Protestant churches. Nevertheless, the attitude of some church leaders, the stance of church denominations, and the consciousness of church members regarding these incidents are far from objective and realistic. They appear to be justifying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pastorship at churches, raising questions over the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of Christianity. This study calls to account for the problem of pastoral succession in South Korea’s Protestant churches and reviews the issue through a discourse on “meritocracy.” It analyzes the social meaning and consciousness structure that it sheds light on. Moreover, the logical structure and application method of the discourse on “meritocracy,” as well as the format and purpose of the discourse, are distinctively specified. The purpose is to separate the intention of the subject of the discourse that attempts to justify pastoral succession from the goal of such discourse, thereby proposing the standards for understanding them and securing the reasonable grounds for re-examining the identity and directivity of South Korea’s Protestant churches through such standards.

Key words: Pastoral Succession, Meritocracy, Merit, Justification, Identity and Directivity

I. 들어가는 글

한국교회에서 초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세습’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¹⁾ 처음 이러한 사태는 일부 또는 몇몇의 초대형교회 목사가 자신의 직위와 재정 운영권을 친인척에게 세습하여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탄받았던 것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 대형교회를 비롯하여 중형 교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악습이 관례처럼 퍼져가고 있으며, 몇몇의 교단은 이 사태를 윤리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 사용에 제시할 근거까지 제공하는 상태에 이르렀다.²⁾ 교단은, 개체 교회들의 상위 기관으로서 존재하지만, 개체 교회들의 윤리적 정체성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지침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방기한 채 이러한 사태를 묵인하고 오히려 정당화해 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상황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한국개신

-
- 1) ‘교회세습’이란 개신교 목사가 자신의 교회 안에서 목사직위나 재정운영권이나 대사회적 영향력을 사적(私的)으로 활용하고 운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중세 때 ‘성직세습’ 혹은 ‘성직매매’로 사용되었던 이 용어는 현대 ‘담임 목사직 세습’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공적인 목사직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에서 364개의 세습교회가 있으며 현재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백서편찬위원회, 『돈·권력·세습』(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83-84;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우리 동네 교회 세습 지도, www.seban.kr/home/sb_what_map, 2023년 8월 8일 최종 접속.
 - 2) 한겨레신문, 조현, (2021.4. 22), 명성교회 불법세습 기록한 백서 나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92029.html?_ga=2.69865104.1661220023.1691330894-891850308.1588822110, 2023년 8월 6일 23시 45분 접속; 배덕만, “한국교회의 세습”, 『신학과 선교』 43(2013), 69-102. 위의 책에서와 같이, 이전에도 한국교회 안에는 ‘교회세습’ 혹은 ‘성직세습’, ‘성직매매’의 문제가 있었다. 1990년대 초 기감, 합동 등 소수의 교단에서 세습 문제가 논의되었던 시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더 많은 교단에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본고는 이러한 사태를 ‘현상’이라고 일컫고, 이 현상이 지속, 확산되고 있는 근본적 의식 구조를 탐구한다. 그 목적은 일련의 사건들과 교단의 대처 행위들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 자료들과 현상 분석을 통해 의식 구조의 문제, 정체성의 방향성 문제를 논구하는 것에 있다.

교의 교회세습 문제는 더 이상 몇몇 교회의 과오나 목사의 인식오류에서 비롯된 과거의 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교회 전체가 비판받는 것에서도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현재 교회세습 현상은 또 다른 차원의 심각성을 함축하고 있다.

우선 교회세습 현상이 비합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개인이 공적인 영역의 것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에 더하여, 종교개혁 이전이나 있었던 교회세습이 500년도 넘는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2023년 한국 개신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사직 세습이라는 사태의 핵심은 공적인 목사 직위를 사적으로 변용하여 교회와 교회재산을 점유한 것에 있다. 그것은 판단기준을 도덕적 기준이 아닌 사회적 법률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이미 ‘부적합’하다는 사실이다.³⁾ 그런데도 종교 안에서, 그것도 개혁 신앙의 뿌리를 둔 개신교 안에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보고 있는 기독교 신앙적 시각과 신학적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경향성이 왜 나타나는가? 그것을 생성시키는 요인들이 있는가?

이 연구는 이 질문들과 함께 사회집단적 행위와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근거로 하여 현상을 관찰하고 그 행위 기능과 의식 구조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서 본 연구는 교회세습 문제가 순전한 도덕에 위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차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세습이라는 행위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점유’와 상관있다는 점, 또한 목사 개인과 결탁된 교단이 이를 ‘능력’으로 정당화 한다는 점에서 교회 내 세습현상이 사회 내 메리

3) 장은주, “메리토크라시와 존엄의 정치: 시민적 주체의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와 철학』 32(2016), 52-53.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능력주의 현상이 우리 사회가 형성해온 근대성을 ‘재봉건화(Refeudalisierung)’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토크라시 현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능력위계주의(메리토크라시)의 논리처럼, 교회세습의 문제가 목사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보상 문제로 여겨진다면 이 ‘세습’이라는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세속주의 여파 정도로 이해될 것이다.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사회적 공정성에 관한 공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윤리(倫理) 대신 공리(公利)처럼 사용되어진 것뿐이라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이에, 본고는 현상을 중심에 놓고 교회집단 안에서 세습논리의 허구성과 이를 허용하는 의식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논제와 논증 범위를 설정한다. 첫째, 교회세습 현상을 볼 때 우선 세습 문제를 발생시킨 목사 차원에서,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교인들의 의식구조 차원에서 차례대로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의 종교문화라는 더 큰 범위에서 교회와 교인, 집단과 개인, 관습과 정체성의 관계를 같이 볼 것이다. 이 때, 종교문화의 범위에서 본다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와 그 의식구조로부터 영향을 받는 교회집단과 그 구성원들이 보다 더 큰 사회와 가지는 관계에서 관찰될 것임을 뜻한다. 종교집단은 그 집단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영향 하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제적 예를 볼 수 있다.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 영역의 문제들이 산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경쟁 과열, 신자유주의 체제의 독점주의, 노동시장의 부족, 소득불균형, 분배원칙의 부재, 양극화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는 불평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최근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능력주의 혹은 능력위계주의)’라는 담론과 더불어 논

4) 종교사회학적 시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주의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참고,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북코리아, 2018).

쟁의 한 가운데를 차지해왔는데, 바로 여기서도 ‘능력과 세습’의 문제가 그 중심에 등장한다. 세습이라는 단어는 중세 봉건시대이나 나왔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전문가적 관료주의 안에서 급상승하여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리고 교회세습의 정당화 논리 역시 현대적 형태로서 ‘전문적 능력’과 ‘세습’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회세습 문제에서 논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가 ‘능력’이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 즉 ‘능력’과 ‘점유’를 연결지어 ‘교회세습’이 타당하다고 정당화하는 논리를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이를 용인하는 의식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다. 특히 이 교회세습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첫째로 ‘교회라는 공적 영역을 세습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이탈시켜 독점적으로 점유하려는 것’으로 놓고, 이 논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다. 둘째로, 이렇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관련짓는 ‘능력’이라는 개념과,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발화 주체와 발화 의도를 해체하여 그 논리가 통용되는 담론구조와 의식구조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세습을 주도하는 발화 주체는 능력주의 담론을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교회 내 침투해 있는 능력위계주의(Meritocracy) 혹은 ‘관료적 능력주의’ 특성은 어떻게 교회 전체를 사유화하는지 볼 것이다. 이 때, ‘능력주의’를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하나는 근대 이후 평등주의 이상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를 구상해 왔던 고전적 의미의 ‘능력주의’가 있다.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 체제 내 관료적 ‘능력주의(Meritocracy)’이다. 그런데 그 둘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 구분해야 한다. 또한 ‘능력주의’ 사고가 한국기독교의 정체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각각 목사와 교단에 이어, ‘세습’을 용인하는 다수 평신도 혹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의식구조는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이 때, 본 논문이 보는 ‘능력주의(Meritocracy, 메리토

크라시, 능력위계주의)’라는 개념은 이전 연구인 〈한국사회의 메리토크라시 현상〉과 그 특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⁵⁾ 그곳에서 정리된 ‘능력주의(능력위계주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부의 세습: 새로운 귀족계급(Aristocracy)으로 등장한다.
2. 권력과의 결합: 보다 넓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 방식(Elitism)으로 연결한다.
3. 부의 영향력: 대중적 동의(Democracy)로 이를 확대해 간다.

II. 목사 개인 차원에서 : 공적 직위와 사적 점유의 결합

교회세습이라는 사태는 “극소수의 목사 개인이 공적 교회의 권한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장에서는 교회세습 문제가 ‘능력 혹은 능력주의’를 통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어떠한지 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세습 비판에 반대하는 입장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교회세습을 옹호하는 논리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볼 것이다. 먼저, 이 사태를 사회학적 렌즈로서 본다면 한국사회의 능력주의(Meritocracy, 능력위계주의, 관료적 능력주의) 현상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점이 생성된다. 이 시각과 함께, 한국 교회들의 세습 문제와 한국사회의 능력주의 세습 문제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보기로 한다.

5) 여기서부터는, 이 논문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를 ‘메리토크라시’와 같이 ‘능력위계주의’를 혼용한다. 이는 이전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Meritocracy’ 답론은 기표와 기의, 혹은 담화 사실과 담화 의도를 따로 분리해야 하는데, 이 구분을 여기 논문에서 다시 강조하고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두 ‘능력주의’의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능력주의 이론의 ‘합장’ 또는 ‘땃’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사회학적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참조, 신혜진, “한국 사회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특성 비판,” 『한국기독교사회윤리』 53(2022), 35-78.

한국개신교 교회 안에서의 ‘세습’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한국 신학계 안에서는 ‘성직매매와 성직세습’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도 등장하여 그 실행을 촉구하기도 했다.⁶⁾ 그러다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체와 통신량 증가로 전 세계가 실시간 보도권으로 묶이게 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이 노출되었고 여기서 종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통신의 발달로 보게 된 것은,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지만 너무나 다른 생활환경과 조건 하에 생존하고 있다는 점, 곧 양극화 현실이었다.⁷⁾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실도 부상되었다.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배처럼 집합적 의례가 어려워지면서 대형교회의 대면 예배가 문제시되었으나 점차 중소교회들의 생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중소형교회들은 코로나 사태로 악화된 경제적 운영 상태에 처하여 담임목사 역시 주중에 또 다른 직업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⁸⁾ 반면에 초대형교회들은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더 많은 헌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모일 때 유대감이나 정치적 동질성을 확인

-
- 6) 선한용, “한국교회, 성직 매매를 경계하라”, 『기독교사상』 40(10) (대한기독교서회, 1996); 장기천, “한국교회 성직세습의 문제”, 『기독교사상』 41(10), (대한기독교서회, 1997); 김광식, “교회세습에 관하여”, 『기독교사상』 504(2000); 김동춘, “교회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사유화에서 교회공공성으로”, 『국제신학』 18(2016), 김명배,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6(2012); 박영신,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우리 사회의 구조와 ‘교회세습’”, 『교회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3); 김관임, “신약성서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 이해(한국 교회의 담임목회자 세습 문제에 대한 신약성서적 고찰)”, 『신약논단』 20(2013), 1087-1121; 배덕만, “한국교회의 세습 -그 뒤뜰린 역사”, 『신학과 선교』 34(2013); 윤덕규, “한국 사회의 혈연주의와 한국 개신교 세습”,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8(2020).
- 7) 김진영, “한국교회의 양극화,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크리스천투데이』(2012. 4. 27) ;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3』(서울: 규장, 2022), 246-256.
- 8) CTS뉴스, 김인에, (2022.4.11), 한국교회, 목사의 직업 고민 중, <https://www.youtube.com/watch?v=iCwX2l3F4eI> , 2023년 8월 6일 23시 26분 접속.

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대면예배를 강행하였으며, 기본적 방침은 ‘정교 분리’라고 방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모임을 통해 정치적으로 동원하여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다.⁹⁾ 이렇듯, 사회적 빈부차는 중소기업들의 ‘빈(貧)’과 대형교회들의 ‘부(富)’가 극대화된 형태로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들이 마치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구분되는 것처럼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분포 속에서 각기 다른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개신교는 그 사이 교회들 간에 사회적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해결안을 찾지 못한 채로, 초대형교회들의 담임목사가 자신의 목사 직분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양도하는 사건들로 인해 또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었다. ‘교회세습’이라 일컬어지는 이 현상은 한국사회 안에서 양극화 된 사회구조 안에 전근대적 위계체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를 더 노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회세습을 비판하는 시각에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었다.¹⁰⁾ 그들은 교회세습이라는 상황은 당연한 것이며 사회에서도 그 성과를 능력대로 보상하고 소유 권한을 부여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부흥’이 목사의 능력이나 노력에 기인한 것이므로 응당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임목사의 ‘능력’과 ‘피땀 어린 노력’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통해 ‘축복’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 성과가 ‘교회세습’의 타당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초대형 교회’와 ‘중형교회’, ‘소형교회’로 그 수치대로 구분하고 그 운영 규모에 따라

9) 조현, “보수교회 497곳 ‘대면예배 허용 요구’ 대면집회 연다,” 『한겨레 신문』(2021. 1.8.),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77545.html?_ga=2.229884444.1661220023.1691330894-891850308.1588822110, 2023년 8월 6일 23시 15분 접속.

10) 백서편찬위원회, 『돈·권력·세습』(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83-89; 한겨레21, 이용필, (2019. 8.18), 교회법 위에 명성교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478.html?_ga=2.169592481.1661220023.1691330894-891850308.1588822110, 2023년 8월 7일 12시 01분 접속.

목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언술들과 위계적 언어를 자주 반복 사용했다. 그럼으로써 차별적 현상이 일반화 되도록 의도하였다.¹¹⁾ 결국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양극화와 불균형의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게 되었으며, 교회들 안에서 ‘능력’은 위계질서를 옹호하는 메리트크라시 담론과 유사한 논리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능력주의’란 ‘업적주의’로 치환 가능한 것으로서, 그 업적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시대적-지역적 요구와 시스템의 적절한 조합 결과라는 지적이 타당하다.¹²⁾ 왜 그러한가? 이 때,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20세기 이전, 능력주의란 근대 사회체제 안에서 개개인의 능력(지능과 노력)으로 적절한 보상과 분배가 가능하리라는 이상적인 근대주의 담론의 하나였다.¹³⁾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처음 ‘메리트크라시’라는 용어로서 다시 ‘능력주의’가 재등장하여 담론으로 사용된다. 처음에는 한 사회학자가 점차 심화되어지는 자본주의 문제점들을 예측하면서 각자도생, 적자생존, 승자독식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한 상태를 우려하여 그 상태를 묘사한 단어였다.¹⁴⁾ 그런데 이러한

11) 김진호, 『권력과 교회』(파주: 창비, 2018), 98-105.

12) 김종엽,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59(2003), 58; 전형준, “능력주의의 함정 - 능력주의의 본질과 폐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43호(2022), 113; 장은주, “능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철학과 현실』 128(2021), 141; 박권일, 『능력주의와 불평등』(서울: 교육공동체 벗, 2020), 20-21. 이 글들의 공통된 논지는 ‘능력’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것이어서 ‘오로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3) ‘능력주의’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하여 보상을 해주는 사회시스템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인간 개인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 판단,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회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다. 조병희, 이재열, 구해란, 유명순, 박상희, 양준용, 『아픈 사회를 넘어』(파주: 21세기북스, 2020), 284-285.

14) Michael Young, *Meritocracy*(Taylor & Francis, 1994), 유강은 역, 『능력주의』(서울: 이매진, 2020).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마이클 영은 사회학자로서 가상사회인 ‘능력주의 사회’를 설명하였는데, 후에 그러한 양상이 점차 사회 안에서 발견되면서 ‘메리트크라시’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1950년대 유럽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나온 불평등문제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능력주의 사회가 될 것을 예견했는데, 능력주의의

우려는 현실을 앞당겨서, 실제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된 이후에 그러한 생존방식을 기정사실화하는 이론으로 쓰이며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구조를 정당화하는데 활용된다.¹⁵⁾ 최근까지 한국사회 안에서 사회정치적 불평등한 지형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던 메리토크라시 담론은 사회 내 노동 및 일자리 등등 불평등 문제, 정치사회적 보상과 관련한 안전에서 거론되어 왔다. 또한 사회 내 수직적 구도 안에서 성별차, 연령차, 학력차 등에 의한 차별을 사실로 인정하고자 할 때 정치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다른 편으로는, 사회학적 시각에서 이러한 정치적 사용에 대하여 비판하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했다.¹⁶⁾ 이처럼 ‘메리토크라시’로 묘사된 사회는, 한 축으로 절대 다수가 원하는 사회 안에 정의와 공정, 기회의 평등에 대한 회구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절대 다수가 가질 수 없는 사회 내 ‘부(富)’의 배분 문제가 또 다른 한 축으로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다.¹⁷⁾ 그리고 노력으로 부를 얻기 원하는 평범한 다수에게 ‘능력’의 특정 법칙을 제공하며

사회가 된다면 처음엔 공정한 사회를 목적했으나 점차 ‘능력 있는 집단’이 생겨나게 되고, 이 집단이 계급화 되어 위계조직 구도를 형성하고, 마침내 그 ‘능력 있는 계급’이 전체 사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불안을 가상 사회의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15) Conrad Hughes, *Education and Elitis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NY: Routledge, 2021), 19-22.

16) Pierre Bourdieu and Jean-Claude Passeron, *La reproduction: éléments pour une théorie du système d'enseignement*, 이상호 역, 『재생산』(동문선, 2003), 24-29; Stiglitz, Joseph, *(The) price of inequ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s*,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분열될 사회는 왜 위험한가』(파주: 열린책들, 2013), 117-122. 사회학자들은, 능력주의 사회는 이를 위한 기회의 평등과 보상의 공정성이 제공되지만 한다면 이후에 오는 불평등은 정당한 것이며 이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수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17) Lisa Duggan, *The Twilight of Equality? : Neoliberalism, Cultural Politics, and the Attack on Democracy*(Beacon Press, 2003), 한우리, 홍보람 역, 『평등의 몰락』(서울: 현실문화, 2017), 43-49. 저자는 신자유주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들으며, 그가 목격한 신자유주의가 어떤 비민주적, 폭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지적한다. 참조, Joseph Stiglitz, *(The) price of inequ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s*,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분열될 사회는 왜 위험한가』(파주: 열린책들, 2013).

양측을 가늠다란 줄, 즉 ‘능력’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설명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불평등한 사회적 부(富)의 분배 문제를 ‘능력’으로 평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하나의 시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주의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기회균등을 전제하는 기존의 능력주의 혹은 ‘고전적인 능력주의’와는 다르다.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명하게 다른 ‘관료적 능력주의’라는 것이다.¹⁸⁾ 우선, 이러한 메리토크라시는 ‘부(富)’를 소유한 사람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에 대한 소유권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공식은 항상 부를 소유한 사람에게서 나와, 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능력’자들 사이에서 유통된다. 그렇게 보면, 어디서 시작하든지간에 이 공식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다.¹⁹⁾ ‘부를 소유하는 사람’이거나 ‘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나 모두 ‘능력자’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식에서 소외되면 무조건 ‘무능력자’로 분류되어 배제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식은 거의 모든 사람을 포섭하고 있다. 이를 ‘능력주의의 닷’이라고 부른다.²⁰⁾ 또는 이러한 룰(규칙)을 두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 일컫기도 한다.²¹⁾ 이처럼 메리토크라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 안의

18) Michael J. Sandel,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서울: 와이즈베리, 2020) 56-59. ‘능력주의’라는 같은 용어로서 두 가지 ‘능력주의’가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샌들은 정확히 이를 찾아내었고 이를 두 가지 명칭으로 분리하여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그의 관점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능력주의 개념을 미국사회에 적용하여 적절하게 설명하였으나, 역사나 종교 분야에 있어서는 논점의 오류도 여럿 포함하고 있다. 단, 여기서는 그의 ‘능력주의’ 문제 제기 중 공동체 붕괴의 문제와 심리적인 효과에 동의하여 참조하였다.

19) Daniel Markovits, *Meritocracy Trap*, NY: Penguin Press, 2020, 8-19; 최경석, “능력에서 연대로-〈오징어게임〉을 기독교윤리적으로 바라보기”, 『기독교사회윤리』 53(2022), 111-138.

20) 이 주제를 중심으로 다룬 책은 다음과 같다. Daniel Markovits, *Meritocracy Trap*, NY: Penguin Press, 2020; Joseph Stiglitz,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s,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과주: 열린책들, 2013).

특권과 특혜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관용적이며, 그것에 대한 권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변호한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신교 교회 안에서 목사의 능력이 한 교회의 ‘규모’를 크게 ‘부흥’시켰다면 그 목사는 ‘능력자’이며 그 교회 운영권과 향후 관리권까지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 근거로 ‘능력’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²²⁾

그렇다면, 교회세습에서 ‘능력주의(메리토크라시 혹은 능력위계주의)’의 논리 적용은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능력주의(메리토크라시)’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들을 점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다. 우선 후자는 ‘맞다’고 할 수 있다. 그 답론 자체가 ‘소유에 대한 우선권’에서 ‘능력’이라는 조건 하나로 순위를 정하고 이를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의 질문에서 보면, 능력위계주의는 사회 전체 부(富)에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에 반하여, 개신교 교회 안에서 ‘능력자’는 그 교회 안에서 담임목사 자신이 정하고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합리성이라거나 공정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에 의한 합리성에서 본다고 해도, 공적인 직위 임용에 대한 권리를 사적인 ‘세습’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종교개혁과 근대 시대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이러

21) Michael J. Sandel, 『공정하다는 착각』, 146-151. 이 부분에서는,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으로 교육 부문의 예를 들면서,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역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학력주의를 조장하여 결국 노동하는 모든 인간 사이에서 사회적 지위를 위계화 하였다고 비판한다.

22) 이혁배, 『한국 기독교윤리 쟁점』(서울: 동연, 2010), 23. “그들은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거대한 교회를 일구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교회의 실질적 오퍼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인 소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성직매매와 성직세습에 대하여 반대하며 나왔던 것임을 상기해볼 수 있다.²³⁾ 그러므로 개신교의 개혁적 신앙 안에서 교회를 ‘세습’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사실이 판명된다. 더구나 근대 이후에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회적 신분이 세습되는 ‘귀족제(Aristocracy)’가 폐지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세습된 신분이 아닌 자기 자신의 노력이 중요해졌으며, 누구나 신 앞에 동등하게 사회 안에서 일하고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명시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인사제설이며 직업소명설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근대적 노동에 대한 개념과 함께 평등한 사회와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원래 ‘능력주의’이기도 했다. 이처럼, 신앙적 개혁정신은 사회 내에서도 기회균등을 실행하고 노력에 따른 보상 분배를 이행하도록 기본 원칙과 개념을 성서적으로 마련하고 실행시켰던 근본 원리였다. 그것에 대한 확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해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힘으로서 작용했고, 종교적 메시지와 더불어 생성된 것이었다. 프로테스탄트의 저항이란, 낡은 신분제를 엄호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당시 중세 기독교적 ‘현상’에 대해 봉기한 새로운 기독교 ‘본질’적 비판정신이자 개혁이었던 것이다.²⁴⁾ 당시 개혁 정신은 ‘교회세습’ 혹은 ‘성직세습’, 교회 타락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생성된 것이었다.²⁵⁾ 심지어

23) 강치원, 『교회세습: 법정에 서다: 초대교회부터 13세기까지 교회법 판례분석』, 78-79. 마틴 루터의 면죄부 비판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 원인 중에는 당시 성직자가 ‘한 교회만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막테부르크의 대주교 알브레히트가 여러 개의 지교회를 유지하면서 마인츠의 대주교 자리를 얻었는데, 이런 불법을 승인받기 위해 엄청난 돈을 교황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이 맡은 교회를 ‘자기 교회’로 간주하여 자식들에게 상속하거나 팔기도 했는데, 이러한 공적 교회의 사유화가 종교개혁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전한다.

24) 최형묵, “종교개혁과 교회세습”, 『뉴 레디컬 리뷰-진보평론』 75호(2018), 140-141.

25) 간혹 ‘성직’을 세습한다는 말은 목사라는 ‘거룩한 직분을 직업윤리로서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의미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성직이라는 명분하에 사적 영역으로 옮겨서 사유화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개신교 정신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당시 로마가톨릭에서도 1000여 년간 논쟁 끝에 성직자의 자격 요건으로서 결혼 금지 즉 비혼을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는 점이다.²⁶⁾

그러므로, ‘교회세습’은 공적 직위를 사용하여 사적 점유를 확정하는 불합리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세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능력주의’ 논지로서 반론을 제기한다. 양쪽 모두 경제적 점유를 동일한 목표로 가진다는 점에서는 메리트크라시 담화 주체나 교회세습을 주도하여 능력주의를 채용하는 입장이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초대형교회의 세습과 관료주의적 능력주의에서의 세습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 세습을 동시에 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그 ‘능력’에 대한 인정을 대중적 동의에서 찾는 것에서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그 결정적 차이로 본다면, 위의 교회 안에서 언급된 ‘능력’은 메리트크라시에서 언급하는 사회적 ‘능력’보다 매우 협소한 범위의 것으로서 시대적, 사회적 합리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II. 교단 차원에서 : 해명과 정당화의 차이

앞에서 본 비교에 따르면, 한국개신교 안에서 나타나는 ‘교회세습’ 현상과 메리트크라시 담론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는 동일한 것이었다. ‘능력’의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을 통해 현재 앞에 놓인 소유나 점유물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소유 대상이 분명하고 그 점유가 ‘능력’에 기

26) 강치원, 『교회세습 범정에 서다』, 104-105. 1059년 라테란 공의회 결정을 보면, “우리는 명령한다: 누군가 성직매매적으로 서품을 받았다면, 그는 성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성직매매적으로 서품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 교회에서도 내부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전한다. 여기에는 교회 공적 재산이 사적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고도 말해진다.

인하는 것이며, 그 능력으로 인해 현재 점유가 타당성을 가진다고 설득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설득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명제 형식으로 보면 그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p이면 q이다.]란 명제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명제는, 원래 ‘고전적 능력주의’에서는, ‘능력’이 있다면 ‘점유 가능하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메리토크라시에서는 이 명제에서 p와 q, 즉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슬그머니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다.²⁷⁾ 다시 말해,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생겨난 근대 이후의 능력주의에서는, [능력 \rightarrow 점유 가능]로 보아서, 능력이 있다면 획득가능성이 공평하게 주어져 사회적 보상을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 본래 명제였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관료주의적 능력주의(능력위계주의)’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던 점유를 먼저 놓고 보면서, ‘능력주의에 의하면 원래 능력이 있었다’고 설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⁸⁾ 그 언술의 중심은 ‘점유’이며, 언술 주체가 현재 목적하고 있는 ‘점유’ 대상이 우선된다. ‘점유’하고 싶은 대상, 그것이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와 동기가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명제를 역으로 설득하는 언어 화법은 ‘목적’의 문제 혹은 ‘목표’의 문제를 연이어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능력주의’가 언급되는 목적은 그 ‘능력’의 소유자와 앞에 놓인 ‘점유 대상’의 소유자가 ‘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와 화법은

27) [P \rightarrow Q] 명제로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은 다음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신혜진, “한국 사회의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특성 비판”, 『기독교사회윤리』 53(2022), 46-48.

28) Michael J. Sandel,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서울: 와이즈베리, 2020) 56-59. 샌들은 이러한 ‘능력주의’로 혼동을 가져오며 오용하는 사태를 일컬어 ‘전통적 능력주의’와 ‘기술관료주의적 능력주의’로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메리토크라시를 ‘능력위계주의’로 해석하고 이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어떻게 쓰이는가?

사실 한국기독교 안에서 대다수의 교회들은 위와 같은 교회세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태에 대해 엄중한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교회세습이라는 문제가 수없이 지적되어 왔고, 여러 차원의 사회적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작 해당 교회나 교단은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 평가를 상관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오랜 시간 사회적 비판이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을 받는 교단은 정작 사회적 기준과 윤리적 평가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회적 비판과는 무관하게 이 사태를 본다. 즉, 자체 교단 안에서 목회자와 관련된 교회세습에 관련된 목회자나 교회를 교정 대상이나 권계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사태를 수치감 없이 지속시킬 수 있도록 총회 법안으로 제정하여 오히려 교회세습을 강화시켜 왔다.²⁹⁾ 교단 안에서 공적 교회를 사적 세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극소수의 이익 혹은 집단의 이해관계를 강화시키고 이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관행이나 관습이 합법화될 정도로 기독교 교회들의 공적인 회의 기관으로서의 교단은 그 집단적 행동과 양태가 폐쇄적이며 이기적이며 비도덕적이라고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교회 또는 성직을 매매하거나 세습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교단 안에서 법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실은 개교회주의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29) 그 교단들은 교인수나 소속교회의 개체수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조직운영 면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사회적 집단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교단들은 건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본보기 역할을 철위한 사례들을 내놓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교단이 개교회의 '세습'에 관련된 규정을 보조하고 가시화하여 문서화했던 예에서 볼 수 있다. 참고, 백서편찬위원회, 『돈·권력·세습』(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13-14, 19-27, 39-66.

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교단은 공적 집단으로서의 대표성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비록 각 개체 교회의 문제나 과오들이 있을 때에도 전체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성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³⁰⁾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가 발생된 원인도 이러한 교회 성직자들의 문제와 이를 방관하고 있던 교황청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볼 때, 사회 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은 가속화된 세속주의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교단이라고 하는 상위 집단이자 지성 집합체가 공동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킨다.

그렇지만 한국개신교 현실에서 몇몇 교단들은 다른 선택을 하였다. 교회들의 양극화 현상과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 등이 언론에서 불거지자 해당 교단들은 또다시 ‘정교분리’의 원칙을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 비판에 대한 방어전선을 구축하였다. 그 태도는 과오에 대한 수동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종교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반격을 가하며 정치적인 방어벽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다수 양심적인 성직자, 신학자, 신학생들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절망감을 주었고, 교회 밖으로는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여 기독교 교회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³¹⁾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교단의 반응에 이어서,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집단으로서의 교단이 담당할 책임이나 ‘공동체 차원’의 시각은 어떠한지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자. 사회적 도덕성을 유지하며 교회세습 문제를 볼 때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교단의 공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기독교 목회자들의 집합적이면서 공적 의결을 생성

30) 이진규, “개신교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당대비평』 12(2000), 236.

31)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서울: kmc, 2010), 180-182, 185, 254-255;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진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3』(서울: 규장, 2022), 218-224.

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그 행위를 통해 개신교 교회들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교단의 문제점으로 교회들의 세습사태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 교회라는 사회 내 종교집단의 존재 목적은 사회적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 동시에 그 내용적 정체성에서 찾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집단의 존재 이유와 그에 맞는 합당한 구조가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세습 문제에 있어 집단 전체가 고의적 목적에 의한 의결이 아닐 경우에는, 개신교 내부에서 혹은 교단 차원에서 성찰적 논의들을 수용하여 합리적 이성애 준하고 표준적 상식에 맞는 평가 기준을 찾아낸 후 그 사실에 부합하는 집단의 가치 규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³²⁾ 그 결과에 따라 교회법을 다시 제정하고 그 적용을 수정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교회세습을 어떤 형식으로든 수용한 교단들이 과오에 대한 계도나 제재 없이, 각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확장된 공적 기관의 권위나 자격도 상실한 채 사회적 도덕기준과도 계속 거리를 둔다고 하면 이것은 고의적 목적으로 표명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 시각으로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정신을 표방하는 ‘교회’가 그 존재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한국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기독교 교회의 행보에서도 그 궤도를 이탈했다고 간주될 것이다.³³⁾ 그렇다면, 기독교 내부의 개혁정신이나 동력기관으로서의 추동력

32) 뉴스엔조이, 나수진, (2023.07.04.), 예정통합, 세습금지법 만든 명성교회서 총회...“후안무치, 굶어 부스럼 만들 것”,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87>, 2023년 8월 7일 12시 22분 접속; 교단의 판단기준과 개념형성에 있어서, 교회세습에 대하여 서양기독교 역사에서 취했던 제도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 미국 UMC 교단의 경우(감독제, 목사 양성과 관리, 최저생활지급 등등), 영국 성공회의 경우, 독일 개신교의 사례들이 한국 교회세습 방식을 위한 대책 모색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33) 허호익, 김경호, 정종훈, 최형목 공저, 『위기의 한국 교회, 진단과 대안』(서울: 동연,

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현재까지 교회세습을 통해 권력과 지위를 사유화했던 극소수가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름과 축복을 위시하여 교회를 점유 대상으로 여기고 목사라는 직위를 사적으로 오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단에서 이러한 경우가 보다 집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회공동체의 사회 존재적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교회의 메세지와는 상관없이, 그 실제적인 목표와 지향은 ‘하나님’이 아닌 ‘자본’임을 확증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³⁴⁾ 그 자본이라는 것에는 목사라는 현 직위에 더하여 재정 통솔권(경제적 운영권)과 주요 인사권(사회적 지위)까지 포함된다. 이는 능력위계주의 혹은 관료주의적 능력주의(메리토크라시)가 추구하는 바처럼 극소수가 자신의 ‘능력’을 주장하여 재력 확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인정과 영향력까지 포섭하여 ‘능력’ 위주의 권력구도를 형성하려한다는 점과 일치한다.³⁵⁾ 이처럼 교단 차원의 교회세습의 문제는 개체 교회의 과오보다 더욱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것을 개혁해야 할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앞에서 보았던 ‘능력주의’가 계층적 사회구조 안에서 개개인을 그 안에 종속시키거나 배제시켰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목사의 ‘세습’은 교단과 일정한 교회 집단들 안에서 결탁 또는 결속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증폭시

2010), 50, 62-68.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에 기여했던 그 공헌과 자제는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한국교회는 자기 소유인 양 했던 부끄러움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4) 자크 엘룰, 양명수 역, 『하나님이나 돈이나』(대전: 대장간, 2010), 56-59. “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이 문제 역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35) 이 부분은 논의가 더욱 개진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한국기독교 내의 기득권층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파워엘리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지면상 이 문제는 따로 다루기로 한다. 참조, 최형목, 『한국 기독교와 권력의 길 - 그 내부에서 바라보며 대안을 찾는다』(서울: 로크미디어, 2009).

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것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가시적 부분보다 비가시적 영역에서 매우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단 차원에서 본 ‘교회세습’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교회세습에 대한 해당 교단의 태도는 기독교신앙에서 벗어난 오류임을 드러냈다. 앞에서 능력과 점유 관계를 명제화 하여 메리트크라시의 담화 논리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한국개신교 안에서 능력을 위시한 교회세습의 문제는 수면 위로 부상하여 양성화되어 왔으며 개신교 교회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 전선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³⁶⁾ 이에 반응하는 개신교 전체 방향성이나 지향은 어떤 지표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낳았고, 교단 안에서 초대형교회가 가진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작동함에 따라 한국개신교가 표방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와 그 실천이 대치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³⁷⁾

둘째, 교회세습 문제를 처리하는 기독교 교단들은 교회세습에 대해 과오를 소명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려는 자세를 취하였다는 점이다.³⁸⁾ 이 과오에 대해 성찰할 가치 기준이나 윤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단 내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음에

36) 최형묵, “종교개혁과 교회세습”, 『종교진보평론』 75호, 뉴 래디컬 리뷰, 2018, 141-143. 저자는 이 책에서, 교회세습이 그 숫자와 0.5% 정도로 추산되는 양에 비하여 그 병폐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그 현상이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있다.” 2. “교회세습은 대체로 집중된 부와 권력을 용이하게 통제하기 쉬운 권위주의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다.” 3. “대체로 이러한 교회들은 목회자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이 부각된다.” 4. “목회지도력의 안정적 계승, 즉 전임자를 정점으로 하는 교회구조의 존속을 목적한다”는 것이다.(141-143)

37) 김경재, 『무례한 복음: 한국 기독교의 선교, 그 문제와 대안을 성찰한다』(서울: 산책자, 2007).

38) 최형묵, 『종교진보평론』 75호, 137-145. 이 글에서는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인 2017년에 그 역사적 의의와는 상반되는 사건으로 한국개신교에서 ‘세습의 교회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을 지적하였다.(138)

도, 해당 교단 내의 총회와 같은 집단들은 자체적으로 통용이 교단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한국기독교라는 종교집단의 사회윤리적 지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 메리토크라시에서 보듯 교회의 집합체로서 교단은 ‘공동체성’의 붕괴와 인간 사이의 ‘신뢰’를 형성할 토대를 소실했다는 점이다.³⁹⁾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관료주의적 능력주의가 새로운 세습귀족제(Aristocracy)를 굳히고 있다고 한결같이 지적한다.⁴⁰⁾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현대에 들어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는 넓혀졌으나 자신이 재능과 노력으로 사회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기회균등, 공평, 정의의 이념 실현은 사실상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서 정의되고 있는 ‘능력’의 평가 기준을 놓고 그 공정성이 논의된다면, 한국교회는 공정성과 더불어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이 답을 성서와 기독교 사상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사회 안에서 변칙 없는 능력주의의 결과적 평가에서 ‘능력’의 정의와 그 내용 증명을 재고하기에 앞서, 한국개신교 안에서 그리고 교단들 안에서 목사의 직업관과 윤리관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 자질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있는지, 혹은 성직자라는 개념 정의와 규정적 내용이 있어서 그 자격에 맞는 교회지도자로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역사와 사회에 대한 지성인으로서

39) Ivan Illich, 『전문가들의 사회』, 18-24. 이반 일리치는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여 왔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왔다고 말한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전문가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능력과 필요성에 의존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형성해왔다는 것이다. 일리치는 이처럼 전문직 엘리트들이 다른 집단과 결속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가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들이 오히려 권력을 보조하여 줌으로써 세속적 이익을 보장받는 방법을 취하여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들의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작동시켰다고 말한다.

40) Michael Sandel, 『공정하다는 착각』, 49-51. 여기서 샌들역시 오늘날의 능력주의가 세습귀족제로 굳어져가고 있다고 언급한다.

양성되고 있는지, 그 사회적 책임과 자유에 대해 합당하게 대우해주고 있는지, 그 과정이 교단 안에서 사회보다 정의롭거나 사회만큼 공정한지, 교회 안에서 평신도와는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직분과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이를 교회법으로 혹은 지도자들의 권한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¹⁾ 교단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며, 각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가능한 것으로 작동시키듯이, 각각의 개별적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들의 집합이자 유기적 공동체로서 교단이 그 실행력을 증명하는데 있을 것이다. 각 교회들과 신학교와 교인들의 연합체인 교단은 그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성직자들의 자기 정체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⁴²⁾ 특히 ‘목사’라는 직분을 자신의 소명으로 수용하고 이를 배우거나, 그 방식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신학 공부를 시작한 신학생들을 비롯하여, 신앙의 교학 과정에 있는 신도들에게 모두 결정적인 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이 학습한 것을 통해 자신이 가진 확신만큼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위해 가르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신학교 혹은 교단에서부터 교회의 지도자로 키워지는 신학생들과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은 기독교라는 가르침이 이 세계 가운데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들이며, 이들은 옹고 그림과 아름답고 추함에 대한 가치를 진리의 합당한 적용으로 현실화하는 역할을 가지기 때문이다.⁴³⁾ 그 삶의 방식은 학습

41) 안계정, 『기독교와 정의』(파주: 이담북스, 2013), 260-267.

42) 양명수, “사랑과 정의 정의로운 한국사회를 위하여”, 『한국사회 정의 바로세우기』(서울: 세창미디어, 2015), 151-158, 169. 교회는 공공선을 증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정체성에서 ‘정의’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 “사회가 정의로울 때, 한 개인도 여유 있는 품성을 갖게 되고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의리는 개념을 내세워 사랑을 정의라고 함으로써 정의 관념을 사랑의 방향으로 무한히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회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 일반의 정의감을 크게 해친다.”

자의 자양분이 되므로 그 관계들 안에서 신뢰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사회윤리적인 선상에서도, 그리고 기독교적 정신에서도 명확한 상식적, 이성적, 합리적 도덕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와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교단이라는 공동체는 그 학습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교육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교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실행될 기준을 마련하는 더 큰 범위의 공적 교회로서 교단의 책임 있는 응답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단의 교회세습지지 결정은 목사라는 직업군이 한국사회 안에서 내포하던 '성직' 역할에 의문을 갖게 했다. 한국근현대사에서 활동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외층에 대한 봉사, 전체 사회에 대해 공적 양심의 기능을 수행했던 상징성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있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왔던 목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직업인이라기보다는 성직자로 불리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수치화되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종교'라는 특수 영역이 가진 영향력으로 그 활동을 인정받아 왔다. 급변하는 세계 구조에서 정치, 경제, 사회,

43) 능력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제도와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선택할 목회지의 환경이나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된 배경에 달려있는 '능력'으로 인해 다른 목회지를 선택할 자유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능력'과 연결된 사회적 보상, 기본 생활보장, 복지 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는 '능력주의'나 '성공주의'에 의해 '실패'로 여겨지기 쉬우므로 신앙에 따라 자유롭고 의지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대폭 감소된다는 점이다.

44) Edward W. Said, *Representation of the Interlectual*, 전신옥, 서봉섭 역, 『권력과 지성인』(서울: 출판사 창, 2011). 이 책에서 사이드는 '지성인들이란 그들 원래의 주민인 최대한 광범위한 대중을 향해 호소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지성인은 전문가, 내부자, 전문직종인으로 불릴 수 있지만, 지성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애국적 민족주의나 집단적 사고, 계급, 인종, 서적인 특권 의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직자는 지성인이 되며,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지 않고 비물질적인 이익을 소유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이들이라고 전한다.

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직접적 실천을 통해 그 신뢰를 쌓아왔던 직업이자 직위이며 직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분야를 망라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위해 조직을 형성하고 제도를 개정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⁵⁾ 이것 또한 메리토크라시에서 등장하는 특징과 동일한 것으로, 전문가들이나 엘리트가 자본가들이나 정치인들과의 결탁으로 자신의 권역을 확장한 것과 동일하다. 지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능력’을 통해 권력과 소유의 결합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한국사회 안에서 메리토크라시 현상이 불평등문제를 가시화했던 것처럼, 한국 개신교 교회 안에서 ‘교회세습’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부상시켰다. 그것은 먼저 ‘능력’에서 권력을, 다시 권력에서 소유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과정에서 교회들 사이에 ‘목사의 능력’은, 메리토크라시의 사용 논리와 같이, 극소수가 점유한 사회적 지위와 특혜가 개인의 ‘자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전체에 대한 독점적 처분 권리를 정당화해 주는 도구로 쓰였다는 점이다. 이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면을 생각해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 특성상 정신적이고 실천적인 가치에서 추출되는 것과는 달리, 교회를 세습한다는 것은 종교적 신앙과 그 진정한 소통의 대상이 각각 신과 공동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적 점유라는 목표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같이 볼 때, 성직세습 혹은 성직매매를 시도했던 각 교회들은 교회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적 집합이며, 공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 소유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오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문제적 사태에 반응하는 또 다른 사태를 관찰하면서

45) Ivan Illich, 『전문가들의 사회』, 21. 전문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의 공적 분야에서 이타적인, 봉사하는 사람들 이라고 여겨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 20년 남짓 동안은 스스로를 위해 조직하고 제도화하여 지배력을 강화하여 왔다고 전한다.

그것이 한국사회 전체와 종교문화에 주는 시사점으로 한국개신교의 방향성 오류, 공동체성과 신뢰 소실, 권력들과 결탁한 지성인의 역할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보다 확장된 교회공동체 즉 교회들의 집합을 관리 지원하는 교단이라는 범위를 놓고, 한국개신교의 교회세습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교단의 태도와 입장,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IV. 평신도 차원에서 : 교회세습을 용인하는 의식구조

이 장에서는 교회세습을 주도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습을 용인하는 평신도들의 의식구조가 존재 한다’는 가정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 전제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교회세습이 가능했던 의식구조를 탐색하며 이를 재구성한다. 한 명의 목사가 천 명 또는 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안에서 단독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교회세습의 사태는 단지 그 한 명의 고의적 행위와 그 실행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교회의 교인들은 단지 성직이라는 권위에 ‘순종적’이거나 전체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대의로서 교회세습 문제를 묵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목사의 인식 오류를 인지하고도 현상을 승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 되어야 할 문제이다. 기독교정신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자체의 의미는 건축물이 아니라 ‘집합’이고 매순간 ‘신앙고백’으로 선언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교회’라 불리고 있는 곳의 주인은 누구인지, 지금 누가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는지가 모호하며, 혹시 주인이 독재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방식은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시 교회세습 현상을 놓고 평신도 스스로가 이 사회적 현상의 기능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판단 지점과 극 근거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를 세습하는 일은 목사 혼자서 가능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사태에 조력할

여지가 있었기에 교인들 혹은 평신도들이 그것에 조용했는지, 그 공통 영역은 어디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런데 ‘교회세습은 시대착오적이며 비윤리적이다’라는 이 비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각 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에 단행한 목회세습은 교회를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교회 세습을 원하는 주체는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⁴⁶⁾ 적극적으로 교회세습 목회자들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교회세습에 직접적으로 조력하지 않아도 무반응으로 그 사태 진행을 묵인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고 말한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보고된다. 목사에 대한 절대 신뢰로 교회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여겨서 동의했다는 사람, 세습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반대하지만 교회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침묵했다는 사람, 목사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주의 종’에게 반대하면 개인적으로 벌을 받거나 신상에 안 좋을 것 같아 두려워서 순종했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는 반대로, 세습을 추진하는 목사나 직분자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다가 위협당하고 교회를 나오거나 탈퇴했다는 사람도 있다. 여러 경우가 등장한다. 이들은 한 가지 기준이나 규준에 의해서 판단 근거를 삼은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각기 자신의 눈으로 사태를 보고 해석하며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목사’라는 직위를 놓고 보는 평신도 혹은 교회 구성원들의

46) ‘교회세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설교 잘하는 담임목사가 성장시킨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 ‘아버지’ 목사의 ‘아들’이 세습하여 교회 질서와 현상유지를 잘해야 한다는 논리를 사용했다. 세습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던 교회는 공동의회와 교인들의 투표로 절차를 밟아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뉴스엔조이, 이용필, (2017. 11. 28.), “예장통합 목회자연대, 명성교회 항의 방문”,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79>, 2023년 8월 7일 17시 7분 접속.

시각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교회 신도들은 ‘반대 의견’을 쉽게 내놓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교회 구조 안에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때, 교회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집합적 성격과 의사 결정구도로서 당회나 재직회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양방향 의사소통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교회라는 공간의 특성상 예배라는 제의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각은 한 지점을 향해 집중되는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가시적 소실점 끝에는 ‘목사’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징적 구도는 실제적인 결정 구도에서도 작용한다. 신적 권위를 전달하는 사람과 그 영향력이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⁴⁷⁾ 중세적 고딕 건축양식으로부터 현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장방형 집회형식의 구조로 변화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설교와 그 권위에 대한 반복적 강조로 굳어진 사고(구조)의 집단적 구조(사고)는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교회 속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전달하는 목사’라고 여기고 그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그런데 이 때 교회 집단 밖에 있거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설교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라고 전해질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교인들은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인지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에서 ‘교회세습’을 묵인하고 목사의 비행에 대해 침묵하는가, 그들 혹은 당신들의 ‘교회’ 개념에는 문제가 없는가? 여기서 목사직을 매매 혹은 세습하려는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어떤 논리로 설명하며, 어떤 부분이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는가?

47)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대한기독교서회, 1999). 497. 이 책의 결론적 논거에서는 한국교회의 구조개혁을 결행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하나는 오늘의 목사중심의 그리고 예배와 설교중심의 교회구조로부터 과감히 탈피하여 예수의 사역과 초대교회가 표출했던 예배, 설교, 성례전, 교육, 교제 그리고 선교의 온전한 구조를 수용하여 이들을 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행위가 그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구상하며 그 일을 피하는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혹은 교인들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받고 있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교인들이 교회세습을 용인하는 집단적 의식구조의 요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사회와 한국개신교 집단의 수직적 구조 문제이다.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사회학자들의 지적 요인들 중 하나는 수직적 권위주의 체계로부터 생성되는 불평등한 관계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왕적 목사, 제왕적 교주,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재벌 총수, 등등’ 제왕적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쓰인다. 무엇을 뜻하는가?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피라미드화 되어 있는 사회 구도와 그 구조 속의 인간관계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도록 구조화된 사회 형태나 집단의 형태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집단의 수장이 되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와 집단들의 형식적 틀을 제외하고도, 교회 집단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의 성격은 이런 권력구조와 권리, 합리적 의견 충돌을 조정하는데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것에 더하여, 목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더욱 우호적인 교회 구성원들은 합리성에 근거를 둔 협동보다는 그 직위에 권위를 크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⁴⁸⁾ 그 직업 자체가 하나의 ‘고귀한 직분’이며 ‘소명’이라고 이해하고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더하여, 몇몇의 리더쉽이 강한 목사들은 자신의 직분을 종교적 제의를 맡은 ‘제사장’이라고 상징화하

48) 성직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에 대한 종교적 성격을 포함하여 성직자라는 책임을 맡은 직분자의 어려움이 감안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권리 다수가 그 중심적 책임자에게 대부분의 권리를 이양한다. 그 권리에는 목회 통솔권, 교회재정 운영권과 교회 주요 인사권, 교단 영향력이 통상적으로 부가된다. 이와 다르게, 반례로, 한국루터교회나 100주년기념교회는 모든 교회를 재산을 중심에 두지만, 각 분야 별로 구분하여 4명의 목사가 이를 나누어 담당하는 구조를 선택, 실행하고 있다.

면서 그 권위를 더욱 고양시키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목사 스스로 예배 설교와 맡은 역할들에 대하여 신의 대리자와 동일시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반 신도들은 ‘성스러운’ 혹은 ‘신성한’ 인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인물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신자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하거나 유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목사에 대한 존중과 추종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목사 직분과 그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우며, 또한 평신도와 목사가 마주하여 동등한 자리에서 의견을 놓고 토론하기 힘든 집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평신도들의 의식구조를 결정하는 첫째 조건은 목사 직분을 중심에 놓고 대화할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불평등한 한국교회의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인들이 교회세습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다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기인한다. 공적 교회에 대한 개념이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고는 각 국가와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교회에서 ‘교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적인 공공기관과 그 집합들이라기보다는 ‘가족주의적’ 요소가 짙은 확대된 가족집단의 형태 또는 지연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⁹⁾ 따라서 교회운영 면에서도 공적인 직분과 직무 이행의 차원에서가 아닌 한 사람의 리더 또는 수장을 중심에 둔 결집체로서 나타난다. 여기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세습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 다수 교인들이나 교회 운영을 같이 책임지고 있는 직분자들의 태도이다. 사회 안에서는 ‘능력’과

49) 지난 세기 한국사회에서 한국 개신교가 역사적 측면에서 또 공적인 분야에서 공헌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나 보다 넓은 교단들이 연합된 개신교 전체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 역사의식,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지속적으로 교육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교회가 각 개체 교회 집단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더 넓은 공동체를 보기 위한 시각으로 확장되어야 했음에도 그 부분이 취약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개신교의 배타주의와 그 극복 모색에 대해서 다음 글 참조. 이혁배, 『한국 기독교윤리 쟁점』, 19-22, 44-45; 안계정, 『기독교와 정의』, 258-259.

관련된 검증과 그 객관적 기준이 수치로 명시된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도덕성 검증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교회세습’에 동의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이유를 물어야 하는 평신도 교육과 지성적 신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회 안위를 위해서’라고 답한 평신도들에게, 사회적 시선에 대한 수치감으로 은폐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종교성 안에서 신성한 권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교회 내 친분관계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질문을 하거나 정당한 비판과 개선을 위한 모색, 토의,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집단주의적 문화가 팽배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교회 밖의 ‘능력주의’ 사회나 교회 안의 목사 ‘능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각인된 불평등과 불평등으로 부정적 선택 압력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수치감, 자기혐오의 감정이 배가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이게 된다.⁵⁰⁾ 이러한 한국교회의 내적 문제를 둘러싼 집단적 분위기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교회세습에 대한 교회 내 저항이나 개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사회의 ‘세습’은 오랜 봉건적 유교 배경에서 장자를 중심으로 조상제사를 지내던 집단문화로서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형태와 생활방식이어서 관습이나 문화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세습’은 한국개신교 집단을 비롯한 종교집단은 물론이고, 세속화되고 합리화된 사회구조에서도 낫설지 않는 인습의 하나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권력세습과 종교적 집단 형태가 하나로 된 형태는 유교제사 집단에서 찾을 수 있다.⁵¹⁾ 이러한 집단 형태는 ‘가족에서 시작하지만 ‘국가적

50) Richard Wilkinson & Kate Pickett, *The Inner Level*, 이은경 역, 『불평등 트라우마』(서울: 생각이음, 2019), 218-247.

51) 이찬수, 『한국 그리스도교 비평』(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122.

위계구조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한국전통적 유교문화에서 보면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집결된 ‘가족’이 점차 확대된 가족과 인척, 학연으로 이어지며 권력엘리트 중심의 서열화된 정치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근세 시대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에서도 유사한 광경이 드러난다. 한국정치사에서 보면 기독교적 엘리트가 과거의 유교적 엘리트와 같이 권력의 중심에서 정치와 결탁되었던 예도 볼 수 있다.⁵²⁾ 이런 시각에서 보면, 유교적 엘리트주의와 제사문화의 결합된 형태는 한국사회의 메리트크라시 현상을 보여주는 효시였으며 현재의 형태는 그것으로부터 배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전통적 유교문화적 가부장주의와 수직적인 위계체계 구도는 상호 결합되어 매우 견고한 권력구도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⁵³⁾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이르러자 하는 욕구와 그 실행에 있어서, 종교가 이를 정당화해 주기도 하고 그 수단이 되어주기도 했다는 점이다.

넷째, 한국교회에서 일반 교인들이 목사의 교회세습을 강력하게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세습 욕망에 동일시하여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라는 집단의 종교적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집단으로 보거나 기독교 내적인 정체성 면에서 보더라도 ‘교회’는 공적인 집단이자

52) 장은주, “메리트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철학연구』 119, 2017; 신혜진, 「한국기독교사회윤리」 53(2022), 56-62. 이 부분은 한국 현대사와 한국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 설정과 지면상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서술할 수 없으나, 한국현대사에서 정치권력과 종교가 결합하는 과정 즉 기독교 엘리트와 한국사회 기독교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떤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역사적 시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3) 장혜경 외, 『한국사회 공동체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서울: 명인문화사, 2020), 89-99. 이 책의 저자들 중 박치현은 ‘청년세대의 생존주의적 능력주의와 사회평화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행하는 ‘메리트크라시’ 담론과 그 현상을 짚어보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메리트크라시(‘능력주의’)를 보면서, 그 성격이 생존주의에서 생성된 것이며, 그 성격이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로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의 능력위계주의 현상과 그 특징을 짚고 있다; 나중석, 「유교적 근대성과 한국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논평」, 『철학연구회 발표논문집』(2017), 21-23.

공동체임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사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가 아닌 이상, 이 공동체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공적 성격은 합리성 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미 상식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의 것을 사적으로 오용하는 시대 착오적 인습과 자본주의적 과욕에서 나온 ‘교회세습’은 다른 말로 하면 ‘성직 매매’라 불리는 ‘악’에 속한 것임을 알고 사회적으로는 ‘비윤리적인’ 것임을 알고도, 이 교회세습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계획하고 의도하는 주체와 같은 동기를 가진다는 것임을 알게 한다. 목사의 설교와 그 행위를 통해 기독교 신앙은 번영신학으로, 경제적 축복은 성공신화로 귀결되는데, 그것을 보는 신도들의 신앙 대상은 바로 그 지점에 귀착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 사적인 성공을 예증해 주는 목사와 같이, 목사의 세습을 옹호하는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에 자신의 유산과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까지 전달하고 싶은 욕망을 세습 목사에게서 보면서 그것이 허용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의 정의와 사랑에 대한 가치기준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다.⁵⁴⁾ 이 때, 이들은 신의 사랑과 정의를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V. 나오는 글

이 연구는 한국개신교의 교회세습 문제를 놓고, 앞에서 제시했던 문제

54)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서울: 한들출판사, 2007), 224-228. 저자는 자본주의 시장 상황과 종교의 사적 문제를 연결시켜보면서, 한국개신교 절대 다수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축복, 특히 물질적 축복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표현하며, 교회는 이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목사 자신들도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사회, 국가, 민족 등의 공적인 관심에서 교회를 제외시켜 갔다고 말한다.

의 논점과 구분한 범위에 따라 그 현상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교회세습 문제의 논점은 ‘공적 직분을 사적 소유로 점유하는 것에 있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하여, 그러한 명제가 활용되는 방식과 논리를 분석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발화 내용과 발화 목적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교회세습과 메리트크라시는 동일한 담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동일한 논리 구조와 화법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능력주의(Meritocracy, 능력위계주의)’에서 담화 사건과 언술 의도가 구분되듯이, 교회세습을 옹호하며 ‘능력주의’로서 설득 구조를 구축하려는 의식 구조와 심층적 동기가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교회세습 현상이 집단화 되고 구조화되어 가는 배경과 원인에 대해 고찰하며,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사태를 관찰하면서 그러한 지속적 실행이 가능한 집단 구조와 그것이 용인되는 의식 구조를 살펴보았다. 범위별로는 각각 목사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그리고 평신도의 차원에서 사태의 양상과 현상의 의미들을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한국기독교 전체로 볼 때, 점차 넓게 확산되고 있는 ‘교회세습’을 보면서 이에 반응하는 평신도들의 사고 및 시각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그 심층적 탐구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탐색하기 위해, 개인에서 집단으로 대상은 넓히되 동시에 보다 본질적 요인들을 찾아 이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했다.

그 결과, ‘교회세습’에서 목사 개인의 ‘능력’이 강조되었던 것에서부터, 교단의 ‘능력주의’ 의식 구조와 이해관계의 결탁과 정당화 태도가 표면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회세습을 정당화하려는 그 목적에는 경제적-정치적 힘의 점유가 그 시초로 있었고, 그 목표에는 능력 자체에 대한 증명이라기보다는 업적을 ‘능력’으로 합리화해서 사회적 인정욕구와 자아

확장 욕구를 사물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회세습 문제에 대한 교단의 태도와 책임을 검토하면서, 공적 기관이자 회의기관이자 의결집단인 교단의 역할도 볼 수 있었다. 교회세습을 하려는 목사의 ‘능력’을 정당화함으로써 집단적 영향력이 ‘권력’으로 변환 가능하도록 조력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즉 ‘능력주의’로 정당화 하려는 교회세습이 집단적인 권력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교회세습의 정당화 과정에서 채용한 ‘능력주의’ 혹은 메리토크라시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서 이제까지 ‘능력주의’ 담론이 사용해왔던 논리 자체가 모순임을 입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교단이 이 사태를 정당화하는 법제화 과정을 뚫음으로써 신뢰, 명예, 교육, 도덕, 본보기 등의 수많은 무형 차원의 능력들이 발휘될 기회가 소실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목사와 교단에 이어서 메리토크라시 담론이나 능력주의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수 교인들의 의식 구조나 상황은 이보다 더욱 심층적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세습 현상이 초래한 문제의 심각성은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신뢰 문제와 기독교 정신의 정체성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데, 교인 또는 평신도들의 의식 차원에서 볼 때 그 사태를 사건 차원에서 중단시키지 못하고 다발성 현상으로 확대되도록 방기한 다수 한국교회 교인들과 평신도, 신학자들에게도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인간의 욕망추구에 대한 묵인과 허용은 교회 공동체와 신학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져야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준다. 만약 그 질문을 무시할 경우, 계속 교회는 인간의 욕망이나 자아욕구 충족에 있어서 그 수단적 역할로 쓰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욕망과 욕구를 현실화하려는 신앙이 더욱 ‘비합리적 신앙’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구조, 오랜 인

습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까지 이어온 가부장적 권위주의 문화나 엘리트 위계주의 문화와도 관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와 교회라는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시각을 도움 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국사회 내 개신교 엘리트 계급의 형성 과정, 이념의 양극화, 결탁 과정들 또한 주의 깊게 들여다 볼 문제들이다. 비록 이 글에서는 ‘능력주의’ 사회로서 한국개신교와 정치경제적 연결성에 대한 논의는 지면과 범위 제한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으나 또 다른 연구주제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접근 시도를 고려할 때, 보다 실천적인 방법론도 폐기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가시적인 업적주의를 넘어서 다양한 ‘능력들’에 대한 의미가 성서를 통해 재조명되고, 이러한 개념들이 사회화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 실현이 작은 교회들로부터 현대 한국사회로 향하게 되는 방향성에 관한 것이다. 이성적인 신앙의 양심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가 바로 교회 목사와 신학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아래로부터’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일 것이라고 볼 때, 이 논의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치원. 『교회세습: 법정에 서다: 초대교회부터 13세기까지 교회법 판례분석』. 남양주: 호모레겐스, 2021.
- 김경재. 『무례한 복음: 한국 기독교의 선교, 그 문제와 대안을 성찰한다』. 서울: 산책자, 2007.
- 김광식. “교회세습에 관하여”, 『기독교사상』 504, 2000.
- 김동춘. “교회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사유화에서 교회공공성으로.” 『국제신학』 18(2016).
- 김명배.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6(2012).
- 김종엽. “한국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59(2003).
- 김진호. “교회의 권력세습과 한국사회의 적폐.” 『제3세계』 121(2017).
- _____. 『권력과 교회』. 파주: 창비, 2018.
- 김판임. “신약성서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 이해(한국 교회의 담임목회자 세습 문제에 대한 신약성서적 고찰.” 『신약논단』 20(2013), 1087-1121.
- 나중석. “유교적 근대성과 한국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논평.” 『철학연구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
- 목회데이터연구소 · 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2022.
- 박권일. 『능력주의와 불평등』. 서울: 교육공동체 벗, 2020.
- 박영신. “교회 세습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우리 사회의 구조와 ‘교회세습.’” 『교회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3.
-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배덕만. “한국교회의 세습-그 뒤틀린 역사.” 『신학과 선교』 34(2013), 69-102.
- 백서편찬위원회. 『돈 · 권력 · 세습』.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 선한용. “한국교회, 성직 매매를 경계하라.” 『기독교사상』 40(10),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신혜진. “한국 사회의 메리트크라시 특성 비판.” 『한국기독교사회윤리』 53(2022), 35-78.
- 안계정. 『기독교와 정의』. 파주: 이담북스, 2013.

- 양명수. “신성에서 거룩으로.” 『기독교사상』 477(1998).
- _____. “사랑과 정의-정의로운 한국사회를 위하여.” 『한국사회 정의 바로세우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5.
- 윤덕규. “한국 사회의 혈연주의와 한국 개신교 세습.”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8 (2020), 461-488.
-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이진구, “개신교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당대비평』 12(2000).
-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 성남: 북코리아, 2018.
- _____.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2010.
- 이찬수. 『한국 그리스도교 비평』.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이혁배. 『한국 기독교윤리 쟁점』. 서울: 동연, 2010.
- 장기천. “한국교회 성직세습의 문제.” 『기독교사상』 466(1997).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장은주. “메리토크라시와 민주주의: 유교적 근대성의 맥락에서.” 『철학연구』 119(2017).
- _____. “메리토크라시와 존엄의 정치: 시민적 주체의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와 철학』 32(2016).
- _____. “능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철학과 현실』 128(2021), 133-151.
- 장혜경 외. 『한국사회 공동체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 서울: 명인문화사, 2020.
- 전형준. “능력주의의 함정 - 능력주의의 본질과 폐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열린 정신 인문학 연구』 제43호(2022), 107-129.
- 조병희 외. 『아픈 사회를 넘어』. 파주: 21세기북스, 2020.
- 최경석. “능력에서 연대로-〈오징어게임〉을 기독교윤리적으로 바라보기.” 『기독교 사회윤리』 53(2022), 111-138.
- 최형묵. “종교개혁과 교회세습.” 『뉴 래디컬 리뷰 -진보평론』 75호(2018), 137-145.
- _____. 『한국 기독교와 권력의 길 - 그 내부에서 바라보며 대안을 찾는다』. 서울: 로크미디어, 2009.
- 허호익, 김경호, 정종훈, 최형묵 공저. 『위기의 한국 교회, 진단과 대안』. 서울: 동연, 2010.

- Bourdieu, Pierre and Passeron, Jean-Claude. *La reproduction: éléments pour une théorie du système d'enseignement*. 이상호 역.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서울: 동문선, 2003.
- Duggan, Lisa. *The Twilight of Equality? : Neoliberalism, Cultural Politics, and the Attack on Democracy*. Beacon Press, 2003. 한우리, 홍보람 역. 『평등의 몰락』. 서울: 현실문화, 2017.
- Ellul, Jacques. (L)homme et l'argent. 양명수 역. 『하나님이나 돈이냐』. 대전: 대장간, 2010.
- Hughes, Conrad. *Education and Elitism: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NY: Routledge, 2021.
- Illich, Ivan. *Disabling Professions*. 신수열 역. 『전문가들의 사회』. 고양: 사월의 책, 2015.
- Markovits, Daniel. *Meritocracy Trap*. NY: Penguin Press, 2020.
- Said, Edward W. *Representation of the Interlectual*. 전신욱, 서봉섭 역. 『권력과 지성인』. 서울: 출판사 창, 2011.
- Sandel, Michael J.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와이즈베리, 2020.
- Stiglitz, Joseph. *(The) price of inequ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s*. 이순희 역. 『불평등의 대가: 분열될 사회는 왜 위험한가』. 파주: 열린책들, 2013.
- Wilkinson, Richard & Pickett, Kate. *The Inner Level*. 이은경 역. 『불평등 트라우마』. 서울: 생각이음, 2019.
- Young, Michael. *Meritocracy*(Taylor & Francis, 1994). 유강은 역. 『능력주의』. 서울: 이매진, 2020).
- 김인애. “한국교회, 목사의 직업 고민 중.” 『CTS뉴스』(2022,4,11), <https://www.youtube.com/watch?v=iCwX2l3F4eI>, 접속일 2023년 8월 6일.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우리 동네 교회 세습 지도.”, www.seban.kr/home/sb_what_map, 접속일 2023년 8월 8일.
- 나수진. “예장통합, 세습금지법 만든 명성교회서 총회...후안무치, 굶어 부스럼 만들 것.”, 『뉴스엔조이』(2023.07.04.)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87>, 접속일 2023년 8월 7일.

이용필. “교회법 위에 명성교회.” 『한겨레21』(2019.8.18),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478.html?_ga=2.169592481.1661220023.1691330894-891850308.1588822110, 접속일 2023년 8월 7일.

_____. “예장통합목회자연대, 명성교회 향의 방문.” 『뉴스엔조이』(2017. 11. 28.),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79>, 접속일 2023년 8월 7일.

조현. “명성교회 불법세습 기록한 백서 나왔다.” 『한겨레신문』(2021. 4. 22),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92029.html?_ga=2.69865104.1661220023.1691330894-891850308.1588822110, 접속일 2023년 8월 6일.

_____. “보수교회 497곳 ‘대면예배 허용 요구’ 대면집회 연다.” 『한겨레 신문』(2021. 1. 8.),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77545.html?_ga=2.229884444.1661220023.1691330894-891850308.1588822110, 접속일 2023년 8월 6일.

논문투고일: 2023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13일

• 국 문 초 록 •

한국 내에는 세계적인 초대형교회가 많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부흥된 교회’ 또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대형 교회들에서 ‘성직세습’이나 ‘성직매매’와 같은 중세교회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사태가 한국개신교 안에서 경향성으로 굳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에 대하여 몇몇 교회지도자들의 태도와 교단의 입장과 교인들의 의식은 객관적 현실 인식과 다르게 나타나며 오히려 교회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책임에 대하여 의문을 더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개신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교회세습 현상을 문제 삼고, 그 양상을 목사, 교단, 교인들의 차원으로 범위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교회세습 사태를 사회적 현상으로 놓고, ‘능력주의(Meritocracy, 능력위계주의)’ 담론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조명해주는 사회적 의미와 의식 구조를 분석한다. 이 때, 능력주의 논리가 통용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징과 교회세습이 가능했던 요소들 사이의 공통점이 추출된다. 그 과정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 담론의 논리 구조와 적용 방식, 담화 형식과 담화 목적을 해체하여 명시한다. 이는 교회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담화 주체의 의도와 담화 행위의 목표를 분리하여 그것을 파악할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 기준을 통해 한국개신교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검토할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제어: 교회세습, 능력주의(Meritocracy, 능력위계주의), 능력, 정당화, 정체성과 지향성
